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공동행

지역의 민관 자율형 협력체계 구축 모델과 사례

2009



/대/통/영/직/속/

지역발전위원회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發刊辭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7월 21일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발표한 이후 9월 10일에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고, 12월 15일에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금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켰다. 그리고 지역발전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발전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로 청와대에 신설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역발전 의지를 천명하였다. 금년부터는 광역경제권을 필두로 초광역개발, 기초생활권개발, 4대강 연계 지역개발, 재정분권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의 성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다. 그리고 기본방향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이다. 즉,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이 산술적 균형에서 역동적 균형으로, 중앙집권적 시혜에서 분권과 자율로, 소규모 분산투자에서 통합과 규모의 경제로, 소모·모방적 지역주의에서 생산·창조적 지역주의로 일대전환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현 시점에서 지역정책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민관협력 모델과 우수 사례를 학습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동행』은 우선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하고,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민관협력의 지역개발 이론을 소개한 후,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 모델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연구하거나 전환된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지역현장에서 자율적이며 연계협력 방식에 의해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이 책자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 상 철

색무취한 획일적 계획으로 전락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도 정해진 틀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 - 집행 - 평가 - 환류의 선순환구조의 창출이 미흡하였다.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II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패러다임 전환

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참여정부는 중앙집권적 정책체계와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도는 제한적인 성과에 머무르면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지방분권을 예로 들면 가장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균형발전정책도 역시 균형특화계획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중앙부처간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액·중복투자가 만연하였으며 시·도간 안배방식을 답습하였다.

자본, 노동, 정보, 금융 등 모든 경제적 자원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균형발전전략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의 국가경쟁력은 국가 주도의 자원배분체제 보다는 지역단위에서 각자 특성을 살린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협력(Local Governance)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자치단체간 협력과 상생으로 자원배분의 규모화, 집적화를 요구하며 행정구역 내부에서도 기업-자치단체-주민-전문가 사이의 전략적 일체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은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조류에 조기대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의 근간을 재구축하는데 있다. 산술적 균형(Balance) 보다는 상생과 협력, 그리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에 의한 균형(Equilibrium)을 추구하며 지역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분권형 시스템의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지나친 평등주의와 행정구역별 획일적인 배분을 지양하며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 '도토리 키재기식' 보다는 절대적인 발전역량을 고양하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